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전면 시행,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

이영소장

선진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출발점에서의 교육 평등을 위해 취학전 교육에 대한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교육은 공공성, 무상성, 의무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은 우리 정부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보편 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는 과정이며,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져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누리과정 고시를 비롯하여 해설서와 지침서 개발, 교사 연수,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었다. 이렇게 진행된 누리과정은 국외 정책 입안자들과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고, 3~4세 누리과정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누리과정의 빠른 안착과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질의 형평성 제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에 의하면, 교원은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누리과정의 영향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을 원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는 초등학교와의 연계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유아 평가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개발한 평가척도를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누리과정의 초등 연계 방안 연구에서는 향후 누리과정 개정 시 초등교육 전문가와 학부모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횡적인 연계를 통한 균등한 질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과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새 정부에서는 3~5세 누리과정 전면시행과 함께 0~5세 교육과 보육에 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밑그림에는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및 계속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청사진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서비스의 질, 학부모 편의, 재정 부담, 행정관리의 효율성,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